

## 호남광역경제권 사업 윤곽

### 광주 R&D 특구·광역철도 등 127개 사업

### 5년간 161조455억 소요... 오늘 청와대 보고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에 맞춰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등 '호남광역경제권'이 함께 추진할 대형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주요 사업은 광주 R&D 특구 지정(1조3천억원), 자동차부품클러스터 구축(1조2천억원)을 포함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힌 동서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이다.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로 구성된 호남광역경제권은 최근 '호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을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3개 시도 발전연구원이 참여한 이 계획은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지역발전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된 후 지자체, 지역발전위, 각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올 말께 최종 확정, 추진된다.

발전 계획은 기존 정부가 5+2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 선도프로젝트 등을 포함해 모두 7개 부문, 127개 사업(사업비 161조455억5천만 원)에

대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

향후 5년 동안 추진될 주요 사업 부문은 ▲발전거점 육성(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구축, 광주R&D특구 조성) ▲교통·물류망 확충(광주·전남 광역 철도 건설, 다도해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문화관광 육성·자원이용(한스타일 전라기지조성, 무병장수형 스포츠 휴양 관광사업육성) ▲광역경제권 연계·협력(광주·대구 철도건설, 광양항-부산항 해상셔틀 운송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 포함된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구축과 광주 R&D특구 지정 현안은 이미 정부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약속한 바 있어 사실상 사업 확정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들 현안은 광주 자동차 산업의 체질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광주를 첨단과학기술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사업이다.

또 광주·전남 광역철도 건설(사업비 3조6천억원)은 광주·전남 공동혁

을 축으로 전남의 장성, 담양, 화순, 나주 등 인근 지역 광역교통망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계획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밝힌 새만금-전주-대구-포항 고속국도(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동서화합이나 국민통합을 위해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 현안이다.

이밖에 예코뮤지엄형 스토리텔링 시티 조성사업, 수변생태 관광벨트 조성사업, 산악생태관광벨트 구축, 해양생태 관광벨트 구축, 세계근대 문화유산의 브랜드화 등 사업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에 대해 현안들인 데다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최종 확정단계에서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5+2광역경제권에 포함된 7개 권역별들이 각기 발전계획을 제출하기 때문에 사업 중복,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이 추진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목포 '뷰티풀 챌린지' 축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범국민 화합 대축제인 '2009 뷰티풀 챌린지'가 15일 목포 유달경기장에서 화려한 개막 축하공연과 함께 시작했다. 축제는 18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감투싸움' 명드는 전남 교육

### 서경용 도교육위원장 사퇴 표명... 주민들 교육위원 비난

전남도교육위원회 일부 위원들로부터 거센 사퇴압력을 받은 서경용 의장이 결국 의장을 사퇴하기로 했다. 〈인터뷰 3면〉

이에 따라 지역 교육계에선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의장을 물러내기 위해 각종 무릎 퍼뜨리며 '감투싸움'에 골몰하고 있는 교육위원들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전남도교육위원회 등에 따

르면서 의장은 이날 오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A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의사를 밝혔다. 서 의장은 16일께 전체 위원과 만나 사퇴 날짜를 알리고 자신과 관련된 각종 오해를 해명할 계획이다.

서 의장은 "일부 위원들이 제기한 의장실 비서진과 운전원 정실 채용 등은 사실과 다르며, 리더십과 의장 자질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받

아들 수 없다"면서도 "의장이 위원들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사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체 9명 위원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 서기납 위원을 제외한 유재원·나승욱·박병학·조춘기·한이춘·민병홍 위원 등 6명은 그동안 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작성하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교육

위에 회부하겠다고 압박 해왔다.

하지만 임기 10개월여를 남겨놓은 '시한부' 교육위원들이 벌이고 있는 막판 '감투싸움'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은 굵지 않다.

의장사퇴에 대한 도 교육청 직원들의 반응도 냉소적이다. 한 공무원은 "서 의장은 '신사'로 통할 정도로 이웃 삼촌 같은 분이다. 왜 물러내려 하지 모르겠다"며 "자리싸움 등 여러 말들이 들리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알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교육위 의장을 맡으면 집행부에 각종 민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데, 서 의장의 경우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사퇴를 종용한 교육위원들을 비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48일간 열린다

### 정부 제한조치 해제 따라 원래대로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우려로 축소됐던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 18일~11월4일)가 정부의 지역 축제 허용 방침에 따라 원래대로 48일간 열린다. 〈관련기사 13면〉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15일 "전시 기간을 오는 10월11일까지 24일간으로 축소키로 했던 계획을 바꿔 원래 예정됐던 11월4일까지 48일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1일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통해 행사·축제 제한조치를 사실상 해제함에 따른 것이다.

재단은 전시 기간을 환원하는 대신,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전시장 출입구에 적외선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자들의 체온을 일일이 검사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각 전시관 입구마다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휴대용 귀제온계와 마스크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시관 내에 보건요원 등 7명의 안전요원을 상주시키고, 119응급의료센터도 설치해 발열 증세가 있는 관람객을 거주지 보건소나 자택으로 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재단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작품과 전시장 내부를 전문가와 언론에 공개하는 프레·프레스오픈 행사를 갖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개헌·행정구역 개편 초당적 접근을"

### 이명박 대통령 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며 정권권에 초당적 접근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5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연합뉴스, 일본 교도(共同)통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 "영도문제에서부터 이념적 문제까지 들어간다면 헌법 개정은 실제로 이뤄지기 힘들다"면서 "행정구역이나 선거구제 개편, 이런 문제에는 통치 권력이나 권력구조 개편으로 제한하면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개헌 논

의를 틀을 제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소선거구제에다 중선거구제를 같이 한다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 기후 변화정상회의, 제64차 유엔총회,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20일부터 6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재래식**  
정갈함/단정/조성형/정국명장  
가정용·업소용 판매  
(1kg / 1kg / 2kg / 5kg / 10kg / 20kg)  
신상품 100%  
산물  
은정직합니다.  
소매·산물 판매 / 1kg 1kg  
소비처 (061)381-9893  
상대실 010-6586-0001  
\*포장건강음식점 운영부담 성업중\*  
\*대량구매 문의 상담 환영\*

영산강살리기는 다음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영산강은 호남지역의 중요한 자연유산이자 우리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해 폐기물투기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